

기획특집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

• 인구 감소시대의 여성 경제활동활성화 과제 :

유연한 근로시간과 근로환경의 중요성

정성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가족친화인증을 통한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제고 방안

신우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과 사용자의 배려·조정 의무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을

중심으로

구미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족친화인증을 통한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제고 방안¹⁾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일·생활 균형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과 달리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제한된 복지 제도 속에서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근무 환경과 유연한 근무 제도를 제공하도록 독려하여, 근로자들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긍정

적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가족친화제도 및 인증제도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인지도, 인증 의향, 그리고 추가되었으면 하는 인센티브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본 원고는 다음의 연구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 및 요약하였습니다. 신우리·전기택·김효경(2024).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 -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영현황과 효과

가. 제도 현황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 도입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

는 제도이다.²⁾ 이 제도의 인증기관은 최초 인증 시점인 2008년에 14개로 시작되어, 2014년에 956개, 2017년에 2,802개, 2023년 기준 5,911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사업체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3년에 대기업은 668개, 중소기업은 4,110개, 공공기관은 1,133개이다.

〈표 1〉 연도별·사업체유형별 가족친화인증 현황

| 년도 | 계 | 중소기업 | | 대기업 | | 공공기관 | |
|------|-------|-------|-------|-----|-------|-------|-------|
| | | 개사 | 비율 | 개사 | 비율 | 개사 | 비율 |
| 2023 | 5,911 | 4,110 | 69.5% | 668 | 11.3% | 1,133 | 19.2% |
| 2022 | 5,415 | 3,706 | 68.4% | 591 | 10.9% | 1,118 | 20.6% |
| 2021 | 4,918 | 3,317 | 67.4% | 520 | 10.6% | 1,081 | 22% |
| 2020 | 4,340 | 2,840 | 65.4% | 455 | 10.5% | 1,045 | 24.1% |
| 2019 | 3,833 | 2,445 | 63.8% | 408 | 10.6% | 980 | 25.6% |
| 2018 | 3,328 | 2,028 | 60.9% | 364 | 10.9% | 936 | 28.1% |
| 2017 | 2,802 | 1,596 | 57.0% | 335 | 12.0% | 871 | 31.1% |
| 2016 | 1,828 | 992 | 54.3% | 276 | 15.1% | 560 | 30.6% |
| 2015 | 1,363 | 702 | 51.5% | 258 | 18.9% | 403 | 29.6% |
| 2014 | 956 | 428 | 44.8% | 223 | 23.3% | 305 | 31.9% |
| 2013 | 522 | 183 | 35.1% | 144 | 27.6% | 195 | 37.4% |
| 2012 | 253 | 76 | 30.0% | 65 | 25.7% | 112 | 44.3% |
| 2011 | 157 | 49 | 31.2% | 43 | 27.4% | 65 | 41.4% |
| 2010 | 31 | 9 | 29% | 11 | 35.5% | 11 | 35.5% |
| 2009 | 20 | 6 | 30.0% | 6 | 30.0% | 8 | 40.0% |
| 2008 | 14 | 1 | 7.1% | 4 | 28.6% | 9 | 64.3% |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나.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은행이 지원하는 200여 개가 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인증마크 부여,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 표창, 무료 컨설팅, 무료 교육이 있다(여성가족부, 2023: 10). 한국은 기업 규모 및 지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다른 것이 특징이며 인센티브 제공 주체도 중앙부처/지자체로 구분될 수 있다.

2) 가족친화지원사업 > 가족친화인증 > 인증제도 안내 > 인증개요, <https://www.ffsb.kr/ffm/ffmCertSummary.do> (접속일: 2024.1.3.).

2023년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인센티브는 71가지, 중소기업은 197가지, 공공기관은 7가지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여성가족부, 2023: 10, 22, 26). 다음의 <표 2>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업 등에 신청 시 가족친화인증기업이면 가점을 부과하고, 법무부는 출입국에서 우대(기업당 1명 우대카드발급)를 하는 등 부처에서 소관하는 업무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대구, 인천), 각종 비

용 및 자금지원 혜택 등 상당히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으로 기업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인증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지원의 내용이 다양하긴 하나 구체적이고 한정적 이어서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가점을 부과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아닐 때는 인센티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기업에게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보인다.

<표 2> 국내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목록 분류

| 구분 | 인센티브 내용 |
|---------|--|
| 제도 소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39가지 혜택이 있음 -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원하는 서비스에는 ① 인증마크 부여, ② 가족친화우수기업 정부 표창, ③ 무료 컨설팅, ④ 무료 교육 등이 있음 - 한국은 기업 규모별로, 지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다른 것이 특징이며 인센티브 제공 주체도 중앙부처/지자체로 구분될 수 있음 - 대기업 인센티브 71가지, 중소기업 인센티브 197가지, 공공기관 인센티브 7가지로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2배 이상 많음 - 인증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인센티브(35개)도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기업에게 "중소기업 가족친화 경영지원금 신청 우대" 혜택이 있음 |
| 중앙부처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제공 인센티브로는 크게 ① 평가 시 관련 사항 반영, ② 보증료 감면, ③ 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이 있음 |
| 지자체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평가 시 가점 부여, 보증료/수수료 감면, 무료 컨설팅 지원, 현판제작 지원, 인건비나 직무 교육비 지원, 융자 지원, 행사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업무분담금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다양함 - 인증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인센티브는 지자체에 의해서만 제공되는데, ① 건강지원의료혜택, ② 관광분야, ③ 문화분야 등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혜택이 존재함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사업"과 같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인증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붙임 2023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대상 제공 인센티브(pp.10-31) 내용 정리,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116호, https://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9383 (접속일: 2024.1.3.).

다. 가족친화인증의 효과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경영의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효선·차운아, 2009; 유계숙 외, 2007; 이병훈·김종성, 2009; 김은정·장영철, 2011; 홍승아 외, 2014). 예를 들어 김효선·차운아(2009)는 여성관리자패널 자료(1기)를 활용하여 가족친화적 제도가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장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들이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은정·장영철(2011)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연구에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일·가정 갈등을 줄이고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도 있다. 유계숙 외(2007)는 가족친화제도가 근로자의 이직 의도를 낮추고 조직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인다고 하였으나 직무성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병훈·김종성(2009)은 가족친화제도가 조직의 노동생산성, 노사관계, 이직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홍승아 외(2014)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드문 사례로, 대기업에서는 가족친화인증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중소기업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미인증 기업에 비해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일·가정 양립의 만족도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우리 외(2024)는 여성관리자패널(2기) 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PSM)방법론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과 사업체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그리고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제도 활용 용이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미인증 사업체에 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높았으며 일·생활균형제도 활용의 용이성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친화인증 심사 항목에 가족친화제도 실행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인증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이 일견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가족친화인증이 실질적으로 제도 도입과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성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친화인증이 단순한 제도적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 복지와 기업의 제도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은 종사자 규모 300인 미만의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인센티브 수요, 세제지원 인센티브 확대에 관한 인증 신청 의향 등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조사는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의 업종, 종사자 수, 지역 분포를 기반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전국의 기업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023년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달간 조사가 진행되었고, 총 53,492개의 기업에

연락하여 최종적으로 1,000개의 기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본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업의 종업원 수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이 88.4%로 절반 이상이였으며, 30인 이상 100인 미만이 9.7%,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1.9%로 나타났다. 기업이 소재한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3.0%,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 47.0%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및 유통업 18.9%, 제조업 18.5%, 교육/보건업 17.1%, 숙박 및 음식점업 10.7%로 나타났다. 비중이 10% 미만인 기업

의 업종으로는 부동산/사업시설 관리 임대업/금융 보험업 9.9%, 건설업/전기, 가스 등/수도 등 원료 재생업 9.7%, 정보통신/기술서비스업 8.6%, 기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업종 6.6%이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2022년 기준 매출액은 15억 미만이 35.3%, 15억 이상 50억 미만이 26.9%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100억 이상 500억 미만 14.0%, 50억 이상 100억 미만 11.2%이고, 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응답한 기업은 1.4%이다.

〈표 3〉 응답 기업의 특성

(단위: 개, %)

| 구분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1,000 | 100.0 |
| 종업원 수 | | |
| 5인 이상 30인 미만 | 884 | 88.4 |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97 | 9.7 |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19 | 1.9 |
| 지역 | | |
| 수도권 | 530 | 53.0 |
| 비수도권 | 470 | 47.0 |
| 업종 | | |
| 도소매업 및 유통업 | 189 | 18.9 |
| 제조업 | 185 | 18.5 |
| 교육/보건업 | 171 | 17.1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7 | 10.7 |
| 부동산/사업시설 관리 임대업/금융보험업 | 99 | 9.9 |
| 건설업/전기, 가스 등/수도 등 원료 재생업 | 97 | 9.7 |
| 정보통신/기술서비스업 | 86 | 8.6 |
| 기타 | 66 | 6.6 |
| 2022년 매출 | | |
| 15억 미만 | 353 | 35.3 |
| 15억 이상 50억 미만 | 269 | 26.9 |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112 | 11.2 |
| 100억 이상 500억 미만 | 140 | 14.0 |
| 500억 이상 | 14 | 1.4 |
| 해당없음/거절 | 112 | 11.2 |

나. 설문조사 결과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조사 참여 기업은 ‘들어본 적이 없다’(63.2%)고 응답하였다.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 27.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7.7%, ‘매우 잘 알고 있다’ 1.3%로 나타났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해 36.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약 9%로 다소 낮아 제도 안내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인지 여부

(단위: 개, %)

| 구분 | 사례수 | 들어본 적이 없다 |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 계 |
|-----------------------|-------|-----------|---------------|-------------|------------|-------|
| 전체 | 1,000 | 63.2 | 27.8 | 7.7 | 1.3 | 100.0 |
| 종업원 수 | | | | | | |
| 5인 이상 30인 미만 | 884 | 63.9 | 27.4 | 7.5 | 1.3 | 100.0 |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97 | 57.3 | 31.9 | 9.9 | 0.9 | 100.0 |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19 | 59.7 | 26.4 | 7.8 | 6.1 | 100.0 |
| 지역 | | | | | | |
| 수도권 | 530 | 65.7 | 26.7 | 6.7 | 0.9 | 100.0 |
| 비수도권 | 470 | 60.3 | 29.0 | 8.9 | 1.8 | 100.0 |
| 업종 | | | | | | |
| 도소매업 및 유통업 | 189 | 59.5 | 29.7 | 9.9 | 0.8 | 100.0 |
| 제조업 | 185 | 54.7 | 32.4 | 11.0 | 1.8 | 100.0 |
| 교육/보건업 | 171 | 67.7 | 22.8 | 8.2 | 1.3 | 100.0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7 | 77.0 | 18.8 | 4.2 | 0.0 | 100.0 |
| 부동산/사업시설 관리 임대업/금융보험업 | 99 | 63.2 | 26.5 | 6.2 | 4.1 | 100.0 |
| 건설업/전기,가스 등/수도 등 | 97 | 72.6 | 21.4 | 6.0 | 0.0 | 100.0 |
| 원료 재생업 | | | | | | |
| 정보통신/기술서비스업 | 86 | 50.7 | 39.3 | 8.9 | 1.1 | 100.0 |
| 기타 | 66 | 65.4 | 33.3 | 0.0 | 1.3 | 100.0 |

다음으로 현재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만으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39.7%, ‘아니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60.3%로 나타나 약 4분의 1 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앞서 결과와 마찬가지로 종업원 수가 많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예’(51.1%)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 기업 소재지 특성에서

는 수도권(41.2%)이 비수도권(37.9%)보다 향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 특성에서는 교육/보건업(53.8%)과 정보통신/기술서비스업(50.7%)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소매업 및 유통업에서의 향후 인증 신청에 대한 긍정 비율은 3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의향 여부

(단위: 개, %)

| 구분 | 사례수 | 예 | 아니요 | 계 |
|--------------------------|-------|------|------|-------|
| 전체 | 1,000 | 39.7 | 60.3 | 100.0 |
| 종업원 수 | | | | |
| 5인 이상 30인 미만 | 884 | 39.4 | 60.6 | 100.0 |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97 | 40.1 | 59.9 | 100.0 |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19 | 51.1 | 48.9 | 100.0 |
| 지역 | | | | |
| 수도권 | 530 | 41.2 | 58.8 | 100.0 |
| 비수도권 | 470 | 37.9 | 62.1 | 100.0 |
| 업종 | | | | |
| 도소매업 및 유통업 | 189 | 31.0 | 69.0 | 100.0 |
| 제조업 | 185 | 32.9 | 67.1 | 100.0 |
| 교육/보건업 | 171 | 53.8 | 46.2 | 100.0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7 | 42.9 | 57.1 | 100.0 |
| 부동산/사업시설 관리 임대업/금융보험업 | 99 | 37.0 | 63.0 | 100.0 |
| 건설업/전기, 가스 등/수도 등 원료 재생업 | 97 | 34.1 | 65.9 | 100.0 |
| 정보통신/기술서비스업 | 86 | 50.7 | 49.3 | 100.0 |
| 기타 | 66 | 39.7 | 60.3 | 100.0 |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신청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603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향후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대하여 신청 의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3순위까지 조사하였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사업장 특성상 인증의 필요성이 없어서' 55.3%, '인증의 효과가 불확실하여' 24.0%, '인증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워' 13.8% 순

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가족친화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13.6%,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해서' 11.6%이다. '기타' 비율은 10.7%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응답내용을 보면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대한 정보나 관심 부족', '대표자의 관심 부족이나 의향 없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등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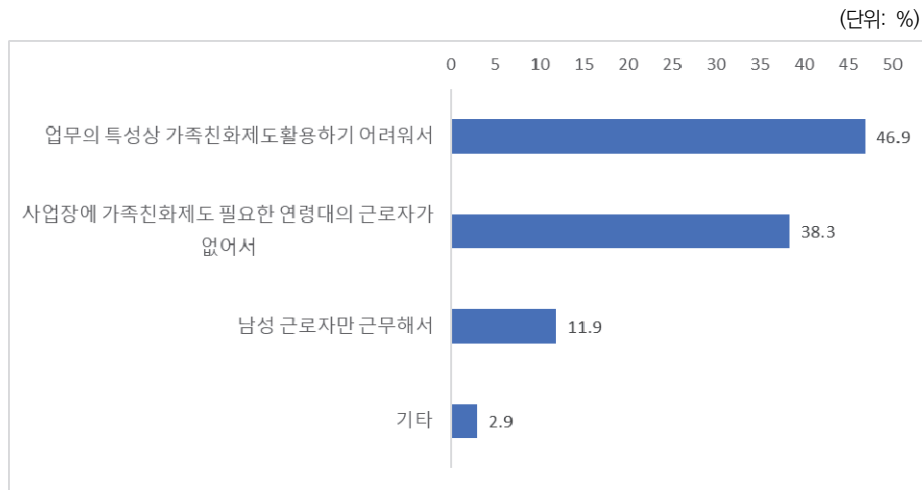
(단위: %)



〔그림 1〕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의향 없는 이유(1+2+3 순위, 중복응답)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신청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 중 그 이유가 '사업장 특성 때문'이라고 응답한 339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야근이 많거나 교대제 형식 근무로 인해 '업무 특성상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46.9%) 기업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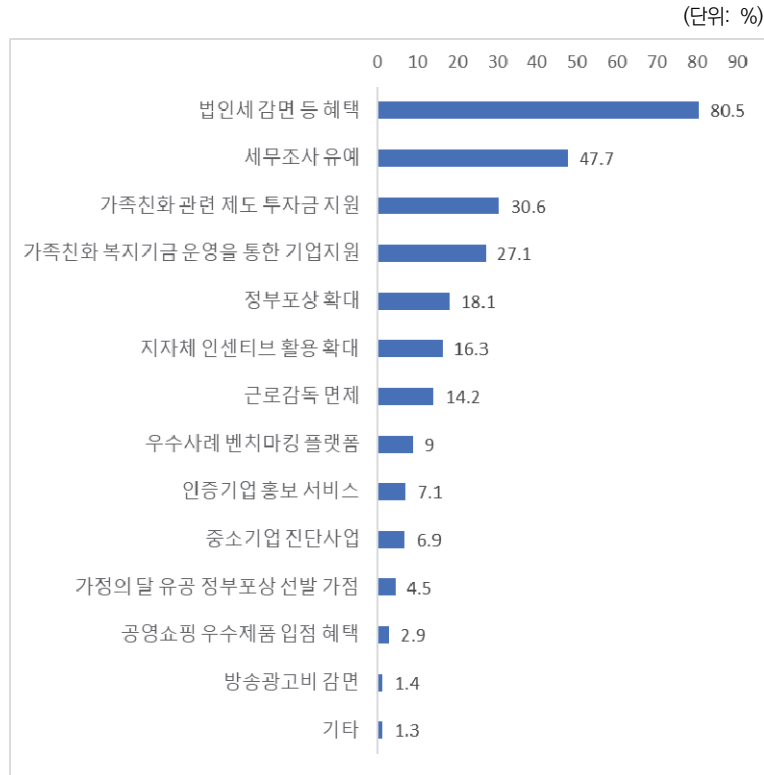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사업장에 가족친화제도가 필요한 연령대의 근로자가 없거나'(38.3%), '남성 근로자만 근무하는'(11.9%)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비율은 2.9%로 '재정상 제도를 도입할 여력이 없거나', '내근직이 없는' 경우이다.



[그림 2]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필요 없는 사업장 특성

조사에 참여한 기업에게 향후 추가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세무조사 유예' 47.7%, '가족친화 관련

제도 투자금 지원' 30.6%, '가족친화 복지기금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27.1%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정부 포상 확대' 18.1%, '지자체 인센티브 활용 확대' 16.3%, '근로감독 면제' 14.2% 순으로 10% 이상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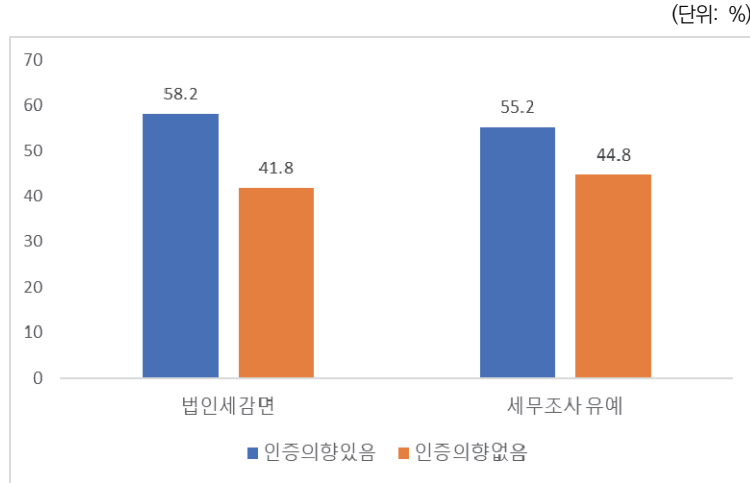


[그림 3] 향후 추가 및 지원을 희망하는 인센티브(1+2+3 순위, 중복응답)

앞서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 603개만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를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지원한다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 인센티브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분석 결과, 법인세 감면 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2%, 세무조사 유예를 지원할 경우는 55.2%로 나타났다. 가

족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한 다음 해부터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를 지원할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인세 감면이나 세무조사 유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요구나 수요를 조사하여 현행 제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제도의 인지도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지원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 향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603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함.

[그림 4]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의향이 없는 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반응

4. 결론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센티브 하에서도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제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가족친화인증에 대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들 위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나 소득세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것과 같은 보편적이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할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업종에 따라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예: 인력 공백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제도 도입 비용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필요가 있다.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가족친화제도가 젊은 여성에게만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친화제도에는 유연한 근무 환경 제공과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는 현재 인증 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근로 감독을 강화하거나, 3년에 한 번씩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패네티를 도입하여 인증 기업이 받는 인센티브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은정·장영철(2011).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영향관계 실증연구-한국과 일본 국제비교연구-”. 『한일경상논집』, 50, 89-128.
- 김효선·차운아(2009). “직장-가정 간 상호작용과 가족친화적 조직지원이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2(4), 515-540.
- 신우리·전기택·김효경(2024).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세제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계숙·한지숙·안은진·최효진(2007). 가족친화 기업경영의 성과에 관한 연구-근로자와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훈·김종성(2009). “가족친화경영의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19(2), 153-175.
- 홍승아·최인희·이아름·이홍식·이영범(2014). 가족친화제도의 기업성과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4-14-01.